

식품업계 가루쌀 신제품 도전

농식품부, 생산단지 5배 확대

59개 제품·메뉴 개발 지원
선정 시 교육·장비 등 지급
생산량 전량 정부 매입

식품과 베이커리업계가 본격적으로 가루쌀 신 제품·메뉴에 도전하면서 정부가 내년 가루쌀 생산단지를 올해 대비 5배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도 1만 헥타르(ha)의 가루쌀 생산단지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15개 식품기업의 19개 가루쌀 제품개발과 지역 베이커리 20개소의 40개 새로운 메뉴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 가루쌀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루쌀 제품개발에는 농심, 삼양식품, 하림산업, SPC삼립, 삼양식품, 풀무원, 해태제과 등을 비롯해, 성심당(로쏘) 등 전국 2대 빵집이 참여해 올해 연말 면류, 빵류, 과자류 등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서울의 하이그라운드제빵소, 인천의 토모루, 경기도의 이학순베이커리, 대전의 콜마브레드, 세종의 세종명가살빵 등 유명 베이커리 업체들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가루쌀 산업 활성화 미래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가루쌀 메뉴 개발에 참여한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가루쌀 1만톤 공급을 위해 38개 생산단지 2000헥타르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엔 이들 식품기업의 가루쌀 수요 확대에 대비해 재배면적을 올해보다 5배 늘린 1만헥타르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가루쌀 생산량은 내년 5만톤, 2025년 8만톤, 2026년 20만톤 규모로 확대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농협 등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해 내년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지원사업에 기존 식량작물공동경영체가 아닌 신규 조성하는 생산단지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루쌀 재배 최소 면적도 50헥타르 이상에서 30헥타르 이상으로 줄이는 등 더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특히, 벼 재배면적이 3000헥타르 미만인 시군의 경우 20헥타르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가루쌀 재배단지로 선정되면 단지 공동운영과 재배 확대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지원을 받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경영체는 공동육묘장, 농기계 등 가루쌀 생산 확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또 가루쌀 생산단지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전략작물직불금을 헥타르당 100만원(이모작 시 250만원) 지급하고 생산량 전량을 정부가 매입한다.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하려면 이달 31일까지 시·군·구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의 공고란 또는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도시농업, 10년 만에 약 200% ↑ 성과

참여자·텃밭면적 각 220%·180% ↑

도시농업 육성정책 10년만에 참여자는 220%, 텃밭면적은 180% 늘었다.

농촌진흥청은 도시농업의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개원 7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해 오는 18일 전북혁신도시에서 도시농업 춘계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방안을 찾고자 육성을 본격화한 도시농업은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한 지 올해로 꼭 10년을 맞는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농업의 최근 경향인 여가와 건강, 기후변화 등을 반영해 수립하고 있는 도시농업의 정책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제기된 도시농업의 현황을 돌아보고 발전방안을 찾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1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이진희 사무관(도시농업 3차 5개년 정책 및 실천계획(안)) △상명대학교 김태한 교수(도시농업 추진 성과와 발전방안) △제주대학교 오욱 교수(도시농업 실태분석 및 전후방산업 분류)가 주제발표를 한다.

2부에서는 유은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관이 ‘도시농업의 사회적, 환경적 및 경제적 가치 평가’에 대해 소개



도시농업의 주요 분야인 텃밭가꾸기. /농진청

할 예정이다. 이어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김진덕 대표가 ‘현장에서 바라본 도시농업의 변화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도시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3부에서는 이연숙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광진 도시농업과장, 경상국립대학교 허근영 교수, 조경시공연구원 노티 안명준 대표, (사)초록에서 전태평 대표와 도시농업 관련 시민단체, 도시농업 종사자, 도시농업 연구자 등이 참석해 종합토론을 이어간다.

김광진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과장은 “그간 공간과 환경 조성 기술을 개발하고 텃밭 다양성 증진을 위한 자원 발굴과 교육·문화·치유에 이르는 활용 자원 개발에 노력해 왔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새로운 도시농업의 방향성을 세우고 이를 실천할 동력을 찾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차상근 기자 skc8472@

산단 주민 2%, 중금속 농도 WHO 권고치 초과

(세계보건기구)

환경과학원, 45명에 의료지원
VOCs 대사체도 대상 포함
포항·울산 환경오염도 평균 상회

주요 산업단지 인근 주민 50명 중 1명꼴로 체내 중금속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9개 산업단지 주변 지역 환경오염도 및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이번주 국민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가산단(광양·시화·반월·여수·울산·온산·포항) 7곳과 일반산단(대산·청주) 2곳을 대상으로 지난 4년(프로젝트 조사 제 3기: 2018~2022년)에 걸쳐 실시됐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총 2099명 가운데 45명의 몸속에서 검출된 중금속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를 초과했다. 납·수은·카드뮴·크롬 등의 물질이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권고치는 건강 보호를 위해 초과 시 노출 감시 및 저감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농도”라며 “이들 주민 45명에 대해 대해 노출량 및 노출경로 추가조사, 농도 저감 컨설팅, 건강진단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가천대, 경상국립대, 순천향대구미병원, 순천향대전안병원, 울산대병원, 충북대병원 등과 연계한다.

국제 권고치가 없는 VOCs(벤젠 등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사체도 의료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대사체란 생체 내 물질변화의 결과로서 생성되는 물질을 가리키는데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의 전국 농도분포 중 벤젠 대사체 검출 상위 5%에 해당하는 값을 초과한 주민이 지원받는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악취를 일으키는 물질이고, 특히 벤젠의 경우 인체에 매우 유해한 발암성물질로 분류된다.

류된다.

환경과학원은 또 광양·시화·반월·포항·청주 등 5개 산단에서 기타상기 도질한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나 추적조사에 돌입했다.

환경오염도 부문에선 포항과 울산 지역 산단의 대기 중 중금속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가 전국 평균을 다소 상회했다. 배출시설 관리 강화 등 환경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2018~2020년 사이 포항산단 내 납 수치가 0.032 $\mu\text{g}/\text{m}^3$, 울산산단 내 벤젠이 0.73 ppb를 기록했다.

지난 2003~2011년(제 1기) 국립환경과학원은 산단별 코호트 구축 및 건강검진, 생체내 물질 측정 등 추적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제 2기(2012~2017년)부터는 환경역학 감시체계로 개편, 매년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생체 모니터링 및 질병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범부처 수출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 수출 유망품목 30개 집중 지원

2030년 재생에너지 수출 5조 목표

정부가 수출 유망품목 3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 시장 수출확대 지원에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다. 재생에너지 수출은 2030년까지 5조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출 유관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출 유망품목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거점무역관 지정, 수출바우처, 해외자사화 사업 등과 연계하는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또 중국 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이 수출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국 시장 동향과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신성장 제조업·소비재·디지털/그린전환 등 3대 분야의 중국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대중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신용보증 한도 확대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복귀기업을 활용

한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한 설비 이전, 국내 투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수출 확대 잠재력이 큰 재생에너지산업 수출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2조6000억원 규모인 재생에너지산업 수출을 2030년까지 5조원으로 끌어올리고 해외진출은 10조원을 목표로 잡았다. 재생에너지산업은 2021년 기준 국내 총 생산 12조 1000억원, 종사자 1만2000명 규모로 에너지 분야 핵심 산업이다.

정부는 우선 2030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 중국외감축분인 3750만톤의 이행을 위해 해외투자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한다. 우선대상국 중심으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예산지원을 일원화하는 등 해외진출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해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녹색수출보험도 약 2000억원 규모로 추진, 금융조달을 지원한다. 그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개도국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지원과 시범사업을 통한 국내기업의 대상국 에너지 인프라 사업 참여도 활성화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어촌공, 시설물 관리로 재해 예방한다

국토안전관리원과 협력체계 구축

한국농어촌공사와 국토안전관리원은 16일 시설물 안전 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관리 기술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시설물 안전관리 정책 자문 및 교육훈련 지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 자문 및 정보교류 ▲정밀 안전진단 내실화를 위한 기술 검토회 전문가 참여 ▲현장 시연회 등 기술 교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시설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시설물 관리와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자문과 첨단 점

검장비 정보교류 등 세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은 농어촌공사에서 유지관리와 안전 점검 등을 수행하면서 많은 경험과 기술력이 집적된 만큼 시설물 안전 문화를 정착하는 데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시설물 안전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위험 요소를 예방해 안전한 삶을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